

## ASEAN-인도 자유무역지대 추진현황과 전망

권 율\*

### I. 머리말

ASEAN과 인도의 경제관계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 인도가 본격적인 경제자유화 조치를 추진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92년 라오 총리가 발표한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은 ASEAN과 인도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인도의 이러한 대외정책의 변화는 역사적으로 긴밀한 동남아시아와의 유대관계를 강화·발전시키고자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ASEAN과 인도는 90년대 초반 이후 십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회·경제적 협력관계를 확대해 왔고, 1996년에는 인도가 ASEAN지역포럼(ARF)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안보적 차원에서 협력관계를 긴밀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ASEAN-인도간의 경제협력논의가 본격화되면서 200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ASEAN 정상회의에 맞추어 인도 총리가 프놈펜을 직접 방문하고, 인도-ASEAN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키로 전격 합의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태국, 싱가포르 등 ASEAN 주요국과도 양자 FTA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면서 인도와 ASEAN과의 포괄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동서남아팀장, ykwon@kiep.go.kr

적 경제협력관계는 그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남남무역(South-South Trade)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ASEAN과 인도의 FTA 추진은 16억 인구를 보유한 거대시장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시장통합에 의한 무역창출효과는 물론 역내 분업구조 개편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ASEAN의 견제로서 인도와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ASEAN의 경우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로 추가하면서 ASEAN+3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한 동남아와 동북아간의 협력구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가 2005년 12월 중순 개최된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에 참여하면서 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의 허브(Hub)로서 ASEAN의 역할과 위상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90년대 이후 인도와 ASEAN의 협력관계 발전을 중심으로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인도-ASEAN FTA 추진현황과 주요 정책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남남협력차원에서 경제통합의 문제를 성장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조망하고, 그동안 확대되어 온 무역 및 투자협력관계를 통해 ASEAN-인도간의 경제협력 현황과 주요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ASEAN과 인도가 추진하고 있는 양자간,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의 추진현황과 주요 쟁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인도-ASEAN FTA 추진전망과 정책과제를 진단하고자 한다.

## II. ASEAN-인도 경제통합의 추진배경

### 1. 개도국 경제통합의 주요특징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의 형태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고(Balassa, 1961), 단계별로 주요 특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FTA)는 국지적 자유무역주의를 실현하려는 가장 초보적인 경제통합단계라고 할 수 있고, 역외국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규정이 필요하다.<sup>1)</sup>

FTA와는 달리 관세동맹(Customs Union)은 회원국간 역내무역자유화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한다. 1960년대의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ies)와 중남미 지역의 메르코수르(MERCOSUR)가 대표적이다. 관세동맹이 발전하여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은 구주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 등이 있다.

또한 유럽연합(EU)과 같이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조정하여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경제동맹(Economic Union)이 달성된다. 이를 토대로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함으

1) 역내 관세 철폐에 중점을 둔 초보적인 형태로서 역외국에 대해서는 가맹국의 독자적인 무역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을 통해 역내 저 관세국을 통한 역외국의 역내 시장 침투를 막아야 함. AFTA의 원산지규정은 역내 부가가치(RVC) 40%를 적용하고 있음.

로써 하나의 단일 경제단위를 이루게 되면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을 통해 경제통합의 최종단계에 이르게 된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이라 할 수 있는 FTA는 특정 국가 혹은 지역내에서 특혜 무역 관세를 상호 부여하거나 역내 관세철폐를 하는 것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경제통합이나, 지역무역협정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2006년 3월까지 WTO에 보고된 RTA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FTA가 125건, 관세동맹 12건,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 20건, GATS 5조 36건으로서 총 193건의 RTA중 FTA가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달하고 있다(WTO, 2006). FTA는 WTO 다자주의의 근간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GATT 규범은 GATT 24조 및 GATS 5조에 의해 그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sup>2)</sup>

특히 개도국간에는 1979년 GATT결정인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에 근거한 제한적 범위의 지역협정 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조치로서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허용됨에 따라 방콕협정(1976), ASEAN 특혜무역협정(1977) 등이 발효하기 시작하였다. 남남무역차원에서 개도국간의 경제통합은 남북무역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산업발전단계가 유사한 개도국간의 분업구조 개편 및 효율화를 위한 무역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2)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rade)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의 전면적인 제외는 용인되지 않고,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원칙적으로 10년 이내) 철폐를 규정하고, 지역무역협정 체결 이전보다 관세 및 기타 무역 규정들이 더 높거나, 무역이 제한되어서는 안됨. 한편 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substantially all discrimination)을 철폐하여야 하고(GATS 제5조 제1항), 협정체결 전보다 서비스 교역에 대한 장벽수준을 높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GATS 제5조 제4항).

3) Todaro and Smith (2003), pp. 578-584 참조.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맹국간의 경제가 상호경쟁적이면서 잠재적으로 상호보완관계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호보완관계는 이질적인 산업구조에 기초를 둔 수평분업관계로 발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발전단계가 상이한 국가간의 경제통합일 경우 역내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발전의 차이로 시장확대에 의한 동태적 이익을 얻을 수 없어 저개발국의 공업화는 저해될 뿐만 아니라 경제통합의 효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이종원의, 1996). 이에 따라 개도국간의 지역통합이 활발히 추진되고, 유럽과 미주의 지역주의 강화에 대응하여 중남미, 아프리카 등지에서 내부 결속성이 강화되면서 비슷한 발전단계에 있는 개도국간의 경제통합이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1990년대 초반 국제적인 통상환경이 급변하면서 다자주의<sup>4)</sup>에 대응한 지역주의가 대두되면서 자유무역지대(FTA)가 확산되어 왔다.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아시아경제권의 부상 등으로 세계경제가 다극화되면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국가들간의 경제통합 움직임이 확대되고 지역적인 중층적 경제체제 형성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전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과 함께 경제블럭의 광역화로 EU 확대, 미주자유지역의 창설논의 등으로 지역경제권의 중층적 구조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2. 경제통합의 역내 추진동향

WTO/GATT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1991~1995년간 49건의 지역 무역협정이 체결되었으나, 동아시아 역내에서 제도적 통합은 다른

4) 다자주의는 1947년 창설된 GATT와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WTO협정에 포함된 무역관련 활동을 규율하는 통상규범 체계를 의미함.

지역경제권에 비해 매우 미진하였다(그림 1 참고). 단지 동남아의 경우 정치·안보협약체로서 출범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지역적 결속력을 토대로 꾸준하게 경제 및 산업 협력을 추진한 결과 1992년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설립하는데 합의하였다.<sup>5)</sup>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1990년 마하티르 총리가 제안한 동아시아 경제협의체(East Asia Economic Caucus: EAEC)구상이 1993년 7월 ASEAN 외무장관회담에서 공식 합의되면서 구체화되기도 하였으나,<sup>6)</sup> 미국의 견제와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그동안 동아시아는 경제규모면에서 NAFTA와 EU에 이어 주요 경제권으로 부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역 및 투자가 확대되면서 역내 분업관계는 물론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발전되어 왔지만, 기능적 통합에 상응하는 제도적 통합을 위한 제반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면서 출범했던 APEC의 경우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주도하는 남북협력체로서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추진하였지만, 상호주의를 배제한 채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적 의도가 작용하였다는 평가이다. 특히 1994년 제2차 APEC 정상회의에서 보고르선언을 채택하였지만, 구속력과 상호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APEC은 그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개방적 지역주의라는 모호한 개념하에 APEC 회원국의 이질성, 합리적 리더십의 부재 등으로 인해 동아시아 역내의 제도적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었다.<sup>7)</sup>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사회주의권의 적극적인 개혁·개방으로 지역정세가 안정화됨에 따라

5) ASEAN의 경제통합과 발전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율(2003), pp. 25~30 참조.

6)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은 당초 EAEG(East Asian Economic Group)을 주장하였으나, 제안내용이 ASEAN에 의하여 공식 채택되면서 EAEC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이와 관련해서 Hadi Soesastro(2001), 권율(2004), 권율외 (2005) 참조.

7) APEC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는 권율·홍수연(2005), pp. 16~19 참조.

ASEAN은 동아시아 유일의 지역공동체로서 정치·경제적 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제적으로는 AFTA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교역활성화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지역경제통합이 가속화하고, 역내 결집력을 활용하여 역외국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왔다. 즉, 1994년 아세안 지역포럼(ARF)이 창설되고, ASEAN은 아세안확대외무장관회담(ASEAN PMC)을 통해 주변국과의 협상력을 확대해 왔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의 대두와 함께 광역화되는 경제블럭에 대응하여 제도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동아시아의 독자적인 지역통합 움직임은 미약하나마 역내 유일의 정치·경제협의체로서 ASEAN을 기반으로 태동하게 되었다(권율외,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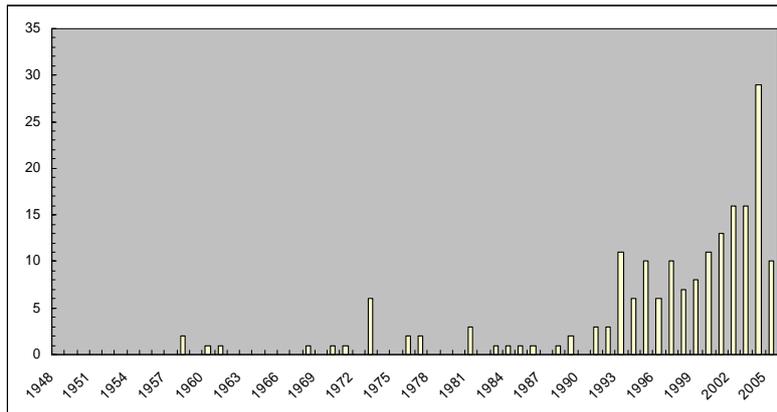
한편 인도는 전통적으로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선진국의 시장개방 확대와 개도국 우대조치를 주장하면서 다자체제 협상에서 개도국과의 연대, 역내 영향력 확보 등에 역점을 기울여 왔다. 인도는 1975년 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5개국이 참여하는 방콕협정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는 방콕협정은 관세,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해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관할 내 개발도상국간의 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체결된 개발도상국간의 특혜무역협정이다.<sup>8)</sup>

또한 인도는 1985년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6개국과 역내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남아시아 지역 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을 창설한 바 있다. SAARC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등 남아시아의 7개 국가가 역내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한 연합

8) 동 협정 하에서 현재 회원국간에 101개 품목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과 인도는 각각 221개와 180여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시행하고 있음. 2001년 4월 중국이 가입함.

체하고 할 수 있다. 이후 SAARC는 권능조항에 따라 1995년 12월 ‘남아시아特惠무역협정(SAPTA)’으로 WTO에 통보되고,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SAFTA)’로의 이행을 위해 역내 경제통합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창설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인도-파키스탄간 분쟁을 비롯한 지역 불안정, 회원국 경제규모 및 경제력 격차 등으로 역내 경제통합은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림 1> 지역무역협정 발효의 연도별 추이



주 : 2005년 11월 현재

출처 : WTO 사무국 자료 이용([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

### III. ASEAN-인도의 경제협력현황

#### 1. 경제규모 및 위상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80년대 중반이후 역동적인 성장을 기록하면서

지난 10여년간 7~8%대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급속히 부상한 동남아 국가들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기반으로 개방경제하에서 외자주도형 성장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권윤희, 2003). 그러나 인도는 1991년 경제 개혁을 단행하기 전까지 네루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해 왔기 때문에 ASEAN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발전 속도가 뒤쳐졌다. 이에 따라 인도는 ASEAN에 비해 인구가 두 배 이상 많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ASEAN 10개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교역규모와 FDI 모두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11억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약 7천억 달러규모의 국내총생산(GDP)을 기록하고 있는 거대시장으로서 중국과 함께 브릭스(BRICS) 국가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표 1 참조). 1991년 이후 대외개방과 개혁정책을 채택하고 외국인투자 유치 및 수출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6%대의 성장을 통해 식량의 자급자족, 1,000억불의 외환보유 등을 달성하였으며, IT 강국으로서 개발잠재력이 높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도경제는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동아시아 외환위기로부터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국면을 유지해 왔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와는 달리 동남아 국가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연평균 7~8%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본격화된 일본의 해외투자진출을 계기로 직접투자주도형 수출공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제조업 생산기반이 크게 확대되고, 대외교역에 있어서도 농산품 및 천연자원 중심에서 공업제품 수출이 증대되면서 교역구조가 고도화되었다. 이와 같이 동남아 국가들이 단기간내에 압축적인 성장과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기반으로 외자주도형 성장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권윤희·김윤경, 2002). 또한

1980년대 말 인도차이나 국가들이 개혁·개방체제로 전환하면서 투자여건이 급격히 개선됨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은 신흥시장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외국인 투자자본이 역내로 대거 유입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90년대 초반 ASEAN의 경제통합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가 출범하면서 동남아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신장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1995년 7월 베트남이 ASEAN에 정식 가입하고, 1997년 미얀마와 라오스, 1999년 4월 캄보디아의 가입으로 'ASEAN10'이 실현됨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은 총인구 약 5.4억명, 국민소득 7,975억 달러 규모의 단일시장으로 발전되었다(표 1 참조).

<표 1> 인도와 ASEAN의 경제 규모 비교(2004년 기준)

	면적	인구	GDP	1인당 GDP	상품수출	상품수입
	천km <sup>2</sup>	백만 명	십억 달러	달러	십억 달러	십억 달러
싱가포르	0.65	4.2	106.8	25,192	180.8	154.6
태국	513	63.4	163.4	2,579	96.1	94.5
말레이시아	330	25.2	117.8	4,607	126.6	99.1
인도네시아	1,920	217.5	257.7	1,187	71.8	50.6
필리핀	300	82.9	86.4	1,040	39.3	40.2
브루나이	5.8	0.4	5.4	14,865	5.1	1.4
베트남	327	82.4	45.3	549	26.0	31.5
라오스	237	5.8	2.1	370	0.5	0.8
미얀마	680	50.0	8.0	159	2.6	2.1
캄보디아	180	13.6	4.6	348	2.5	3.0
<b>ASEAN<sup>1)</sup></b>	<b>4,494</b>	<b>545.4</b>	<b>797.5</b>	<b>1,462</b>	<b>551.3</b>	<b>477.8</b>
<b>인도<sup>2)</sup></b>	<b>3,287</b>	<b>1,080</b>	<b>691.5</b>	<b>610</b>	<b>79.2</b>	<b>1,071</b>

자료 : 1) Global Insight 참조.

2)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Economic Survey*, 각년호,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Monthly Economic Report*, September 2005, Reserve Bank of India, *Annual Report*, 각년호 참조.

2004년 기준으로 인도와 비교해 볼 때, ASEAN의 인구는 절반수준이나, 경제규모면에서 ASEAN이 인도보다 약간 크다. 그러나 동남아 국가들도 대내적으로는 인구, 면적, 국민소득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어 인도 못지않은 저소득국가가 다수 존재한다. 특히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는 1인당 국민소득(GDP)이 약 200~400 달러 수준에 불과한 최빈개도국이고, 베트남도 549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인도는 우수한 저임 노동력, 광활한 국토, 선진 IT기술 보유 등으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도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 대외개방, 외국인투자 유치 및 수출정책 추진으로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고('03년 8.5%, '04년 6.9% 성장), 2004년 12월 쓰나미 피해와 2005년 카슈미르 지방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산업전반의 호조에 힘입어 2005년도 성장률은 7-8%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고유가, 산업 및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국내수요 증가 등으로 무역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활발한 서비스 수출과 해외송금 유입이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인프라 시설의 낙후, GDP의 25%에 이르는 높은 농업 의존도, 관료주의·부패 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저축률 상승, 견조한 서비스업 성장세 유지, 농업생산성 제고, 인프라 투자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인도경제는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생산의 호조 및 외국인 투자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현재의 성장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지만, 골드만 삭스(2003)의 예측에 따르면, 2020년 인도의 경제규모는 6위, 2030년에는 러시아와 독일을 제치고 4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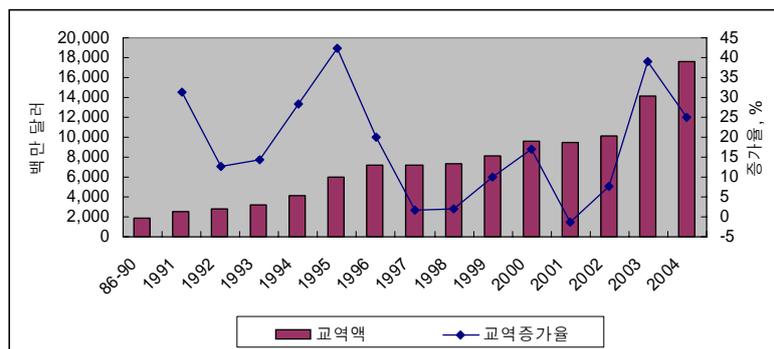
2. 교역

인도의 동방정책이 발표된 1992년만 하더라도 ASEAN-인도간의 교역규모는 28.4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인도의 개혁·개방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교역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0년에는 95.4억 달러, 2004년에는 176.2억 달러 규모로 크게 증가하였다. 연도별 교역규모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동방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연평균 30%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그림 2 참조).

그러나, 1997년 태국에서 촉발된 동남아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아 교역증가율은 크게 둔화되었다. 2000년을 전후로 동남아 국가들이 경기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인도와 ASEAN 교역규모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03년의 교역증가율은 전년대비 39%를 기록한 바 있고, 2004년의 경우에도 25% 증가하여 인도-ASEAN 교역규모는 조만간 2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림 2> 인도의 對ASEAN 교역규모 및 연도별 증가율(1986-2004)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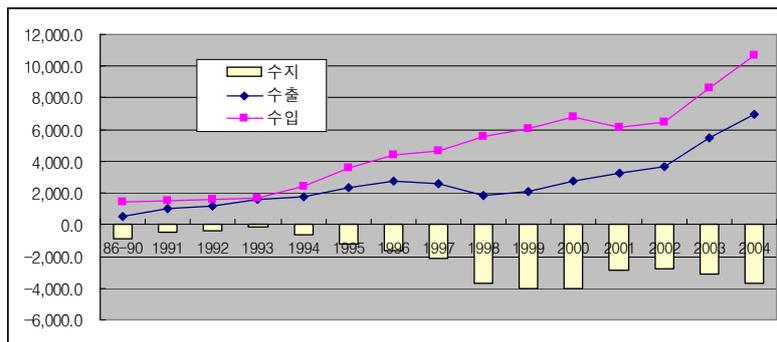
ASEAN 국가들에 대한 인도의 수출은 1990년대 초반 1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0년 약 28억 달러를 기록하여 2배 이상 증가하고, 2004년 현재 7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인도의 對 ASEAN 수입은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인도의 교역수지 적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4년 현재 약 4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3 참조).

국별로 살펴보면 싱가포르의 대 인도 수출은 약 41.7억 달러, 말레이시아 30억 달러, 인도네시아 18.5억 달러, 태국 9.1억 달러 순이다(부표 2 참조).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1990년대 중반이후 인도와의 교역규모가 급증하면서 2000년 양국 교역총액이 37억 달러 수준에 이르게 되고, 2004년에는 67억 달러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인도와 ASEAN 교역규모의 38%에 달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인도와 ASEAN의 교역관계는 순조로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동남아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외환위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단

<그림 3> 인도의 對ASEAN 수출입 추이(1986-2004)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2005 (부표 1과 2 참조)

지 1997-1998년 동남아 경제위기가 심각한 국면을 겪게 되었을 때 인도-ASEAN 간의 교역과 투자를 위시한 경제관계 전반에도 위기를 불러오기도 하였으나, 동남아경제가 1999년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양 지역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노력이 재개됨으로써 ASEAN 국가들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주춤하였던 경제협력 관계는 2000년 이후 점차 회복되어 현재는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 3. 투자

1990년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ASEAN의 주요국들에 있어서 인도는 중요한 투자대상국으로 부상되었다. 인도 기업과의 협력이 확대되면서 직접투자가 급증함으로써 ASEAN은 미국과 EU의 뒤를 이어 인도의 세번째 투자그룹으로 부상했다. ASEAN 5는 인도의 동방정책 이후 1992~97년간 對인도 투자액을 두 배 이상 늘렸다. 특히 1990년 후반에서 2001년에는 인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기타 민간 항공, 공항 건설, 도로 개발, 전력 등과 같은 경제하부구조(SOC)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인도는 ASEAN 국가들에 대해 철강, 섬유, 석유화학, 시멘트, 설탕, 의약품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과 더불어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프로그래밍과 같은 첨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경험한 1997년을 기점으로 ASEAN 주요국들의 투자는 크게 위축되었다. ASEAN 주요국들의 對인도 투자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여 2003년 말레이시아는 220억 루피를 투자하였다. 싱가포르도 168억 루피를 기록하고 있으나 여타 동남아 국가들의 투자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순위 7위를 기록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투자 급증으로 2005년 9월 말 현재

ASEAN 주요국의 투자 비중은 10%에 이르고 있다(표 2 참조).

<표 2> ASEAN 각국 및 중국의 對인도 직접투자 추이

(단위: 천만 루피)

	1991-2002	2003	2004	2005	누적총액	(백만달러)
싱가포르	2,277.3	1,680.5	2,855.0	11,090.3	36,903.1	(893.1)
태국	2,445.7	53.2	93.6	230.7	2,823.1	(74.6)
말레이시아	3,035.8	2,202.1	375.3	91.6	5,704.8	(133.1)
인도네시아	1,246.4	35.1	12.8	0.7	1,344.9	(29.4)
필리핀	1,866.0	0.2	11.9	5.9	1,884.0	(52.4)
<b>ASEAN5</b>	<b>10,871.2</b>	<b>3,971.1</b>	<b>3,348.6</b>	<b>11,419.2</b>	<b>48,659.9</b>	<b>(1,182.6)</b>
베트남	3.9	0.3	0.0	0.0	4.2	(0.1)
미얀마	0.0	2.3	0.0	0.0	2.3	(0.1)
중국	20.0	3.0	21.2	41.3	85.5	(2.0)
기타	1,039,196.5	112,195.0	169,295.4	113,120.0	1,414,757.1	(34,337.6)
세계	1,050,091.6	116,171.7	172,665.2	124,580.5	1,463,509.0	(35,522.4)

주: 1) 2005년 통계는 2005년 9월까지의 수치임.

2) 괄호안은 백만 달러.

자료: Secretariat for Industrial Assistance, *SIA Newsletter October 2005*,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 4. 인도-ASEAN 협력관계의 제도적 기반

90년대 초반 추진되기 시작한 동방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인도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다각적인 협력관계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양자간에 무역 촉진을 위해 태국과 무역공동위원회(Joint Trade Committee)를 구성하는 한편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과도 공동위원회를 두고 무역 관련 사항을 활발하게 논의하였다. 인도네시아와도 고위 관리급에서 양자 경제 및 무역관계 전반을 협의하고 있으며, 미얀마와 양자 경제 및 무역관계를 검토하는 다양한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과 공동사업위원회(Joint Business Councils)를 설치하여 양 지역의 정부뿐만 아니라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려는 기업인 모두에게 유용한 포럼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양 지역간에는 정기적인 기업인 대표 교환 프로그램과 무역전시회 참여 등의 형태로 교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다자적인 측면에서 ASEAN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인도와 아세안은 1992년 부분대화상대국(Sectoral Dialogue Partner)에서 1995년 12월에는 완전대화상대국(Full Dialogue Partner)으로 관계가 발전되었다. 1996년 7월 아세안지역포럼(ARF)에 가입한 인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과 발전에 대한 정치안보적 협력관계를 강화시켜 왔다. 그리고 2002년 이후에는 정상회의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인도-아세안의 협력관계는 정치 및 안보, 경제협력, 개발협력 등을 통해 다양화되고, 과학·기술, 운송 및 인프라, 중소기업 등 각 부문별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논의되고 있다.

단계적인 경제협력 확대조치는 무역 및 투자부문에서 상호 자유화를 위한 논의로 구체화되면서, 1995년 2월 'ASEAN-인도간 무역·투자협력을 위한 전문가그룹'과 이를 계승한 'ASEAN-인도 무역·투자 작업반'으로 이어졌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ASEAN 상의(ASEAN CCI)'와 인도의 4개 주요 경제단체(FICCI, CII, ASSOCHAM, FIEO)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특히 개발협력 부문에서는 무역·투자, 과학·기술, 인적자원개발, 관광, 운송 및 인프라, 보건, 중소기업, 농업 등을 주요 협력분야로 선정하여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10월 인도는 인도-아세안 협력기금으로 250만 달러를 내놓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의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2001년 말 중국과 일본이 ASEAN과의 FTA

를 거론하면서 인도·ASEAN FTA 논의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2001년 당시 ASEAN과의 교역규모는 인도가 97억 달러였으나 중국의 경우는 416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중국을 의식해 인도의 ASEAN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는 2002년 9월 ‘ASEAN경제장관회의’시에 개최된 ‘ASEAN-인도협의회’에서 인도-ASEAN간 자유무역 및 경제통합을 추진한다는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양측의 정부관계자 및 업계대표로 구성된 테스크포스를 설치한다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내에 양국 공동대표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2003년도 경제장관회의에 제출토록 하였다. 아울러 2002년 10월 뉴델리에서는 ‘인도-ASEAN 비즈니스회의’를 개최해 양 지역간 자유무역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협의한 바 있는데,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1차 인도-ASEAN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러한 논의들이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당초 인도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체인 BIMST-EC<sup>9)</sup>, BOBCOM<sup>10)</sup> 등의 창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2000년에는 버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의 5개국과 ‘메콩-갠지스 협력사업 (Mekong-Ganga Cooperaton scheme)’이라는 새로운 협력포럼을 제안하기도 했다. 동 그룹은 인도가 동남아 국가들과 맺고 있는 문화적 연계를 강조하면서 관광, 문화, 교육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인도는 동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왔으며, 이러한 인도의 전략이 보다 구체적인 결실을

9) BIMST-EC은 Bangladesh, India, Myanmar, Sri Lanka, Thailand-Economic Cooperation)은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의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협력체임.

10) BOMCOM(Bay of Bengal community)은 SAARC 회원국에서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대신 미얀마와 태국을 추가한 공동체임.

맺은 것이 2002년 11월 ASEAN과의 FTA 체결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2002년 11월 5일 인도와 ASEAN은 제1차 정상회의에서 향후 10년을 목표로 양 지역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으로써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인도는 ASEAN 회원국 중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및 베트남 등 4개 저개발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혀, ASEAN과의 자유무역을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의사를 내비쳤다. 또한 인도는 무역뿐만 아니라 ASEAN과 폭넓은 경제협력 관계를 지향하여 제1차 정상회담에서는 ‘메콩강 개발계획(Mekong Basin Development Cooperation)’ 등 ASEAN 지역의 경제개발계획에도 적극 참여할 것임을 표명하는 한편, 새로운 ASEAN 회원국에 대해 조기에 특혜관세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sup>11)</sup>

인도와 ASEAN은 발전적인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경제적 번영 외에도 안보와 반테러 연대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는 2003년 4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5차 인도-아세안 공동협력위원회(JCC)를 개최하여 국제테러 방지에 대한 공동협력방안을 논의하고, 2003년 8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2차 인도-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또한 인도는 전격적으로 동남아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TAC)에도 가입하는 한편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에 서명함으로써 ASEAN과의 FTA 추진에 공식 합의하였다.

---

11) 제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주요 사항은 첫째, 인도-ASEAN 정상회담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둘째, 정책입안자 뿐만 아니라 양 지역간 인적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 언론, 학계, 업계 등 다양한 계층의 교류를 확대기로 합의함. 셋째, 인도-ASEAN간 양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양 지역 Think-Thank간 네트워크 개발을 지원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IV. ASEAN-인도 FTA 추진현황

##### 1. 인도의 FTA 추진정책

전세계적으로 지역무역블록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그동안 지역무역협정에 가입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실제로 SAPTA나 방콕협정, BIMST-EC 등에 가입한 이후 인도의 교역량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더구나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협정 중 어느 것도 세계 무역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남남협력차원에서 개도국위주 또는 남아시아 지역경제권의 경제협력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SAFTA) 실효성이 낮아지고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소규모 국가와의 양자간 FTA를 통한 인도 경제에의 상승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인도는 다른 지역과 연계한 지역무역협정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특히 경제위기이후 개혁과 개방정책에 의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인도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주변국만 아니라 주요 파트너 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주변국과의 FTA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세계적인 지역 경제통합으로 인한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고, 각국의 FTA 확대에 의한 양자간 경제협력 확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인도정부도 주변 또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순철·최윤정, 2005).

현재 집권여당인 통일진보연합(UPA)은 국민민주연합(NDA) 정부가 추진해 온 FTA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기존에 추진해 오고 있는 국가들과의 FTA 협상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인도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통합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

눌 수 있다. 첫째, 비슷한 경제발전단계에 있는 인접국 SAFTA, 스리랑카, BIMSTEC 등과의 경제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FTA를 체결하거나 준비중이고, 둘째, 경제발전단계가 인도보다 앞선 태국, 싱가포르 등과 같이 투자유치 확대를 주목적으로 하면서 상대국으로부터의 급격한 수입급증 또는 상대국을 통한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배제하려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일부국가와는 FTA를 바로 추진하기 보다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특혜관세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TA)을 체결한 후 이를 점차 FTA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1998년 12월 스리랑카와 양자 FTA를 추진하였는데, 이는 인도가 체결한 최초의 양자 FTA로서 2000년 1월 발효되었다. 상품분야 관세인하에 있어서 인도는 3년, 스리랑카는 8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하였고, 상품교역 뿐만 아니라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4년 8월이후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도는 일부 국가들과는 FTA를 바로 체결하기 보다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특혜관세를 2005년 10월 개최된 무역·대외경제위원회(TERC) 회의에서 만모한 싱 총리는 GCC, SAARC, ASEAN 및 한국 등 아시아 인접 국가들과의 양자 또는 지역차원의 FTA를 조속히 체결할 것임을 지시한 바 있다(주인도대사관, 2005). 특히 SAFTA의 경우 2004년 1월부터 본 협상이 개시되어 인도, 파키스탄은 관세를 7년내에 0~5%로 삭감하고, 방글라데시 등 여타국가들은 10년내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협상을 계속하면서 2005년 10월 카드만두에서 실무회의가 개최되어 최빈국에 대한 차등 관세인하에 합의한 바 있다.

<표 3> 인도의 자유무역협정과 경제협력 현황

	특혜무역협정(PTA)	자유무역협정(FTA)	기타 지역협력연합
주요 내용	특정국가 또는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 우대	역내 무역자유화, 역외 독자적 관세주권	정치·경제적 고려에 따른 경제협력
기체결	방글라데시(1980) 네팔(1991) 부탄(1995) 미얀마(1995) SAPTA(1995) 아프가니스탄(2003) MERCOSUR(2004)	스리랑카(합의:1998/발효: 2000) 태국(합의:2003/82개 품목 조기실시계획 시행, 발효: 미정) 상가포르(합의 2005.6/발효: 2005.10.1) SAFTA(합의:1985/발효:2006.1 단계적 발효, 최종합의:2016 예정)	방콕협정(1975) SAARC(1985) BIMST-EC(1997) IORARC(1997) BOBCOM(1999) IBSA(2004)
협상중	칠레	ASEAN(합의:2002/종결:2006 예정) 방글라데시(합의:2002/종결:미정)	
검토중	이란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중국, 한국, EU, 칠레, 말레이시아, 우루과이, 이집트, MERCOSUR, 일본, 모리셔스, IBSA, GCC	

자료 : 이순철·최윤정(2006), p. 3 참조.

## 2. 인도의 ASEAN에 대한 경제통합 추진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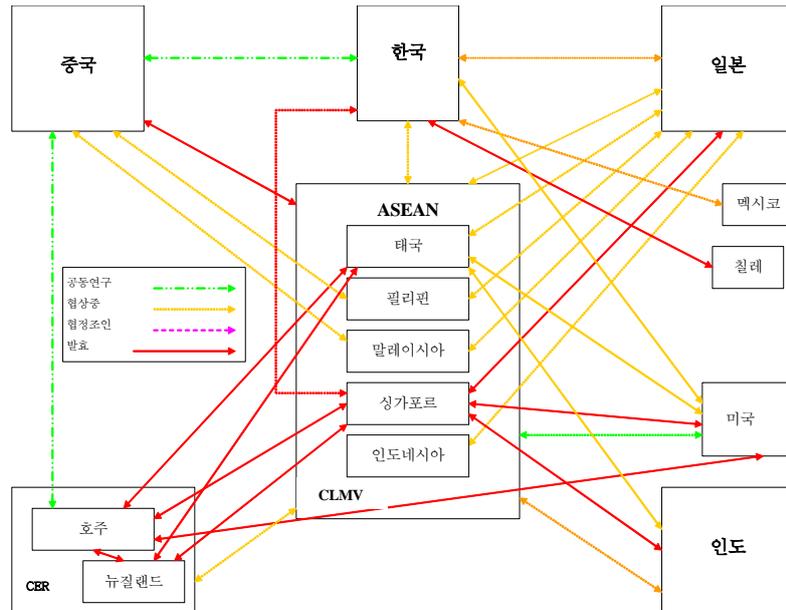
인도의 FTA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남아시아 주변국과 함께 ASEAN과의 FTA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의 FTA 추진정책의 기본방향은 ASEAN과의 FTA 추진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새로운 시장과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를 주목해 왔고, 경쟁대상인 중국이 FTA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황에서 아시아 역내 지역통합은 더 이상 인도에게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각도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연관성을 높이는 여러개의 지역협력체에 참여해 왔다. 특히 인도는

BIMST-EC, BOBCOM 등 아시아 국가간의 그룹 창설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97년 6월 인도는 남아시아를 동남아의 중요한 2개국인 태국, 미얀마와 연결하려는 의도에서 태국과 함께 BIMST-EC의 설립을 적극 추진했다. 인도는 BIMST-EC을 벵갈만 지역의 교역 및 관광 촉진의 수단인 동시에 ASEAN과의 연결고리로 활용할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998년 태국에서 개최된 제1차 BIMST-EC 경제통상장관회담에서는 BIMST-EC을 ASEAN과 SAARC를 연계하는 교량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BIMST-EC은 인도의 동방정책에 중요한 요소이며 ASEAN과의 경제 협력에 새로운 차원으로 높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파키스탄을 제외한 SAARC 회원국에 미얀마와 태국이 추가로 참여하고 있는 ‘벵갈만공동체(Bay of Bengal country, BOBCOM)’도 발족시켰다(권율 · 최윤정, 2003).

특히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지역에서 ASEAN+3 협력체제가 본격화되고, 최근 중국이 아세안 등과의 FTA에 적극 나서는 등 동남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급속하게 확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인도정부는 ASEAN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토대로 본격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그림 4 참조).

이에 따라 2002년 제1차 인도 · ASEAN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03년 10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2차 정상회의에서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여 FTA 추진에 공식 합의함으로써 인도와 ASEAN 간의 경제협력에 실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ASEAN의 기존 회원국(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5개국과는 2011년까지 관세철폐를 약속하고, 필리핀과 ASEAN 후발국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4개국과는 2016년까지 점진적인 관세 인하를 합의하였다. 특히 인도 정부는 선자유화 조치(Early Harvest Programme: EHP)를 통해 ASEAN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약속하기

<그림 4> ASEAN과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



자료 : 필자작성

도 하였다. 그러나 ASEAN으로부터 우회수입을 우려한 인도정부는 ASEAN과의 협상에 있어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 시행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 중순 제12차 협상이 뉴델리에서 개최된 바 있지만, 양측은 양허안 및 원산지규정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인도는 팜오일을 비롯하여 민감품목을 관세할당품목으로 지정하고, 양허제외품목을 850여개나 설정하여 ASEAN과의 협상에서 인식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ASEAN 전체와의 협상과는 별도로 인도는 ASEAN 개별국가와의 협상에도 적극적이어서 태국,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태국과는 2003년 10월 FTA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2004년 9월부터 82개 품목에 대한 선자유화 조치를 시행키로 하였

다. 그러나 민감품목 수와 관련 태국측은 관세철폐 또는 관세인하의 예외품목을 500개 이하로 제한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인도측은 1,100개 정도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여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인도측은 ASEAN의 역내 부가가치(RVC) 40%와 함께 세번변경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여 태국과의 최종 합의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는 RVC 기준만을 충족할 경우 ASEAN 진출한 외자기업들을 통해 우회수입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본 소니사가 인도공장을 폐쇄하고 태국 및 주변 동남아국가에 진출한 ASEAN 투자기업을 활용하여 인도 시장에 수출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자 인도정부는 FTA 추진으로 오히려 외자유치에 일정부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2005년 6월 서명한 인도-싱가포르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CA)의 경우에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2년 4월 공동연구그룹(JSG)을 발족하여 2003년 5월 싱가포르와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고, 13차례 협상 끝에 체결한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은 상품관세 철폐외에 금융서비스, 투자 및 인적자원 교류 등 포괄적인 협력분야를 포함시켜 싱가포르로부터의 FDI 유치 및 인도 전문인력 수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인도는 싱가포르 FTA 협상에서 인력 이동과 전문적인 서비스 자유화 또는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 중점을 두고 협상을 하였고, 싱가포르 CECA 협정에서는 양국의 전문자격을 상호인정하기 위한 적합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선정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였다. 특히 IT, 회계, 건축 및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보건 분야 종사자(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진료보조원 등)들이 우선 대상이었다. 우수한 서비스 지식과 인력을 수출함으로써 인도는 국내 인력의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한편, 인도보다 경제발전 단계가 높은 국가로부터 통신, 운송, 전력, 금융서비스 등의 인프라를 확충

하여 제조업 분야의 성장과 효율성을 제고,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이순철·최윤정, 2005).

### 3.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와 ASEAN의 역할

ASEAN과 인도의 긴밀한 지역통합노력은 지난 2005년 12월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ASEAN+3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개최된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인도가 신규 가입국으로 참여하면서 ASEAN을 포함한 16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역내의 공동관심사와 향후 아시아 지역협력 질서 구축방안에 대한 폭넓은 협의를 통해 ‘칼라룸푸르 선언’을 공동 합의문으로 채택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EAS의 위상과 역할을 역내 공동 관심사에 대해 정치적 및 경제적 이슈에 대해 폭넓게 대화할 수 있는 협의체로 규정하고,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궁극적인 목표를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 및 경제적 번영의 도모라고 설정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개방적, 포괄적이며 투명하고 외부지향적인 협의체가 될 것이며, 특히 ASEAN이 여타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가국들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참여국 결정기준도 ASEAN이 설정한 참가결정 기준을 기초로 하고, 아세안이 의장국을 수임하여 ASEAN 정상회의 개최에 맞추어 연이어 개최할 것임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당초 예상했던 ASEAN+3를 토대로 ‘확대 ASEAN+3 정상회의’가 아닌 ASEAN을 중심으로 한 ASEAN+6 차원의 협력체제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ASEAN은 2002년 이후 ASEAN+1 차원에서 ASEAN-인도 정상회의를 매년 추진하면서 그동안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인도를 동아시아 정상회의 신규 참여국으로 받아들임으로

써 ASEAN을 중심축(hub)으로 한 지역협력구도를 확대·운영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를 실현하게 되었다. ASEAN측이 합의한 EAS 참여국 기준은 ASEAN의 대화상대국으로서 ASEAN과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에 가입한 국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중국이 제안한 EAS 조기개최에 대응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서 ASEAN은 인도를 염두에 두고, 2005년 4월 세부에서 개최된 ASEAN 비공식 외무장관회담에서 EAS 참여국 기준에 합의하여 인도, 호주와 뉴질랜드를 신규참여국으로 확정할 바 있다(권율·이창수, 2005).

이와 같이 ASEAN이 동아시아 지역협력 구도에서 인도를 활용함으로써 중국 주도의 지역통합은 인도라는 변수를 맞이하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당초 ASEAN+3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ASEAN 중심의 주변 6개국을 연계한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상당부분 당초 예상을 벗어나 ASEAN의 일방적 주도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내 참여국가들의 이해관계가 효과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 특히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데 합의하고, 내년에는 필리핀 세부에서 제2차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그동안 논란과 진통을 거듭해 온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ASEAN의 주도권을 인정함으로써 주요 쟁점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지만, 협력의제와 관련해서는 ASEAN+3 협력체제와 큰 차별성이 없고, 지역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ASEAN 지역안보포럼(ARF)과 큰 차별성을 갖지 못하여 EAS만의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한편 인도로서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여함으로써 대외경제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확보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최근 인도가 지역무역협정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 협력의 대상을 ASEAN을 교두보로 활용하여 점차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가 ASEAN과 FTA를 체결한 것은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전체에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ASEAN 국가들과 테러와의 연대 퇴치를 표방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처는 당장에 인도 경제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는 인도 정부의 대외 정치, 경제 정책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인도·ASEAN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은 중국과 일본을 의식한 다분히 정치, 경제적 논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인도의 전략은 상당 부분 새로운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제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역동적 성장패턴을 보여온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규모 면에서 NAFTA, EU에 이어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고, 이번에 인도, 호주 등이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ASEAN+3 경제권의 경제규모는 2004년 현재 약 7.8조 달러로서 전 세계 GDP의 19%, 교역규모는 3.6조 달러를 기록하여 전 세계 총교역의 19.5%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 움직임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SEAN+3 협력체제가 확대되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되면서 세계인구의 절반과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4%로 확대되고, 교역 규모도 21.5%로 증가함으로써 범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표 4 참조).

&lt;표 4&gt; 주요 경제권역별 GDP 규모와 교역비중(2004년)

	GDP		교역	
	십억 달러	%	십억 달러	비중(%)
ASEAN	796.8	1.94	1,025.0	5.63
한·중·일	7,006.2	17.05	2,517.6	13.83
ASEAN+3	7,802.9	18.99	3,542.7	19.46
인도·CER	1,412.3	3.44	378.5	2.08
ASEAN+6	9,215.3	22.43	3,921.1	21.54
NAFTA	13,402.5	32.62	3,183.4	17.48
E U	12,845.4	31.26	7,329.2	40.25
세 계	41,086.3	100.00	18,207.0	100.00

자료: GlobalInsight(2005); IMF(2005),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Quarterly*. 권율외(2005),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01 재인용.

## V. 평가 및 전망

인도는 1992년 라오 총리가 동방정책을 발표한 것을 분수령으로 ASEAN과의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해 왔다. ASEAN과 인도의 교역 및 투자관계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경제적 유대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2002년 개최된 제1차 인도-ASEAN 정상회의를 통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FTA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ASEAN-인도 FTA 체결 선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때, ASEAN-인도 FTA는 인도 측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중국과 일본이 ASEAN과의 FTA를 거론하면서 인도는 각기 ASEAN과의 FTA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sup>12)</sup>

12) 2001년 ASEAN과의 교역규모는 각각 인도가 97억 달러인 반면 중국이 416억 달러에 달했으며, 중국의 무역흑자폭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ASEAN과의

이에 따라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개최된 ASEAN-인도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을 공식 발표한 바 있고, ASEAN-인도 FTA 초안에 의하면 인도는 현재 조기관세인하품목으로 100여개 품목을 설정하여 2006년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03년 10월 발리에서 개최된 ASEAN-인도 정상회의에서는 포괄적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는데, 현재 ASEAN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의 협력관계 강화정책은 중국, 일본의 관계에 대응한 상호 견제 및 균형유지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ASEAN-인도 FTA는 비록 협정체결 기한을 10년으로 유보해 놓고 있지만, 최근 인도의 적극적인 FTA 추진노력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 주요국과 쌍무적인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지역간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도는 2005년 12월 쿼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도 참여하여 아시아 지역통합 움직임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당초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의 힘겨루기 양상이 치열해짐에 따라 ASEAN은 전략적으로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인도를 신규참여국으로 초청하였고, 이를 통해 인도가 아시아 역내 지역통합의 주역으로 전면에 등장하게 되어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권율외, 2005). 역내 국가간 실질적인 협력관계와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고려할 때 ASEAN 10개국, 중국과 인도라는 신흥공업국과 한국을 포함한 일본과 호주 등이 포함된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해 남아시아와 ASEAN간의 경제교류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EAN-인도 FTA는 많은 장애요인이 있어

---

FTA를 비롯해 인도의 경쟁적인 FTA 참여는 중국을 의식한 면이 크다고 볼 수 있음.

실질적인 FTA 발효에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뚜렷한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집권당인 UPA 정부가 출범한 이후 FTA 추진정책에 다소 변화가 있었고, ASEAN과의 FTA로 우회수입을 우려한 인도로서는 원산지규정에 상당한 이견을 표명함으로써 FTA 시행이 지연되고 있음은 이를 단적으로 반영한다.

한편 인도는 ASEAN과의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비교적 관세 수준이 낮은 ASEAN과 FTA를 추진할 경우, 인도 국내산업에 미치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sup>13)</sup>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인도내 산업의 피해는 보다 클 것이며 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관세율이 150%를 넘는 인도의 자동차산업과 같은 고관세 업종과 인도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는 농산품 분야(예컨대 식용오일 등) 등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농산품 분야는 ASEAN의 가격경쟁력이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권율·최윤정, 2003).

ASEAN과의 FTA 목표를 향후 10년간의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할 경우 국내산업 피해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되겠지만, 인도의 평균관세율이 ASEAN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인도 업계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FTA 추진에 따른 업종별 영향은 산업별로 규정된 양 지역간 관세 격차에 따라 일차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향후 협상에서 산업의 개방과 보호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ASEAN과 인도의 FTA 협상은 양허안과 원산지 규정에서 현격한 인식의 차이를 보면서 협상은 진전되지 않고 많은 난항

13) 인도는 일반품목의 경우 기본최고관세가 30%에 이르고, 여기에 부가관세(보통 16%) 및 특별추가관세(4%)를 포함할 경우 총 관세율이 약 50%에 이르는 대표적인 고관세 부과 국가 중의 하나임.

을 겪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ASEAN이 결합하면 16억 인구의 시장에 GDP 규모가 1.5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FTA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어서 남남협력 차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ASEAN에 대한 인도의 수출은 지난 몇 년간 상당히 증가했으나 아직 100억 달러에도 못 미치는 실정인바 교역을 비롯한 경제협력의 제 분야에서 발전의 여지가 많다. 국내시장에 안주해왔던 인도의 정부와 기업인은 이제부터 태국, 싱가포르를 물론 ASEAN에 대한 시장을 활용해 인도가 비용 및 여타의 부존자원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제품을 중점적으로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장확대를 통해 제품 다양화 및 부가가치 창출 전략이 효과적으로 수립된다면, IT 분야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도가 떠오르는 소프트웨어 강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동남아 각국에게 기회와 도전이 될 것이고, ASEAN-인도 FTA는 중장기적으로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경제통합, 자유무역, 남남협력

#### 참고문헌

- 권 율. 2004. 『동아시아 지역주의: ASEAN의 시각과 전략』. 『동남아시아연구』. 제14권 1호. 한국동남아학회.
- \_\_\_\_\_. 2006.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과와 향후 과제』. 『수은 해외경제』. 통권 제279호. 한국수출입은행.
- 권 율·김윤경. 2002. 『ASEAN 산업·교역구조 분석』. 정책연구 02-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 올 · 박인원 · 정인교. 2003.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 올 · 오쿠다 사토루 · 왕윤중 · 정재완. 2005.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 올 · 이창수. 2005.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개최배경과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5-40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 올 · 최윤정. 2003. 『인도-ASEAN간 경제협력과 FTA 추진현황』. 『KIEP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순철 · 최윤정. 2005. 『한 · 인도 CEPA에 임하는 인도의 FTA 전략과 우리의 대응방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6-0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종원외, 1996. 『국제지역경제』. 비봉출판사.
- 주인도대사관. 2005. 『인도 통상 · 투자 진출안내서』. 서울.
- ASEAN Secretariat. 2004. Annual Report 2003-2004. Jakarta.
- \_\_\_\_\_. 2005. Annual Report 2004-2005. Jakarta.
- Balassa, B. 1961.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George Allen & Unwin Ltd.
- Baru, Sanjaya. 2001. *India and ASEAN: The Emerging Economic Relationship Towards a Bay of Bengal Community*. Working Paper No. 61.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ICRIER).
- Devare, Sudhir T. 2002. "ASEAN-India - on the threshold of a new era in partnership". *The Hindu*. November 2002.
- East Asia Vision Group (EAVG). 2001. *Towards an East Asian Community: Region of Peace, Prosperity and Progress*. EAVG Report printed in Korea.
- Export Import Data Bank. *Export Import Data*. Department of

- Commerc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 Goldman Sachs. 2003. *Dreaming with BRICs: The Path to 2050*. Global Economics Paper No. 99.
- Hadi Soesastro. 2001. "Towards an East Asian Regional Trading Arrangement." In Simon S. C. Tay (eds.). *Reinventing ASEAN*. Institute of Southeast Asia Studies (ISEAS). Singapore.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각년호.
- Kwon, Yul. 2004. "Toward a Comprehensive Partnership: ASEAN-Korea Economic Cooperation." *East Asian Review*. 16(4): 81-98. The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 Sethuraman, S. 2002. "India's new image in a ASEAN". *The Hindu Business Line*. November 2002.
- Singh, Shri N.K. et al. 2002. *Report of the Steering Group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Planning Commission, Government of India.
- Stockwin, Harvey. 2002. "Asian Powers compete over ASEAN FTA". *The Times of India*. November 2002.
- Tendulkar, Suresh D. 2000. *Indian Export and Economic Growth Performance in Asian Perspective*. Working Paper No. 54.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CRIER).
- Todaro and Smith. 2003. *Economic Development*. Eight Edition. Addison Wesley Longman.
- WTO, 2006. *Regional Trade Agreements Notified to the GATT/WTO and In Force by Type of Agreement*. (as of 1 March 2006).

## &lt;부표 1&gt; 인도의 對ASEAN 수입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ASEAN합계	한국
86-90	761.1	443.7	59.3	94.6	12.8	22.6	0.0	7.9	0.0	0.1	1,402.1	2,266.8
1991	1,004.3	318.9	56.1	63.4	46.6	16.7	0.0	5.5	0.0	0.0	1,511.4	469.2
1992	934.9	430.3	69.6	65.4	94.6	8.6	0.2	19.4	2.4	0.0	1,625.3	441.6
1993	954.6	213.7	99.9	73.9	106.5	225.6	0.0	18.9	1.8	0.0	1,695.0	1,803.6
1994	1,261.3	527.4	277.7	192.6	109.5	13.0	0.0	14.1	0.2	0.0	2,395.8	1,160.4
1995	1,877.4	820.7	381.0	290.5	145.9	20.2	0.0	10.4	26.3	0.0	3,572.4	1,125.6
1996	2,075.4	1,209.4	531.0	242.5	134.9	179.0	0.0	9.1	0.3	0.0	4,381.7	1,177.2
1997	2,284.9	1,185.9	689.5	294.5	168.6	33.8	0.1	13.2	2.6	0.0	4,673.1	1,150.8
1998	2,438.3	1,800.5	722.9	283.9	169.4	37.5	0.0	12.6	4.3	0.0	5,559.3	1,669.2
1999	2,513.1	2,068.3	923.9	373.9	156.5	41.5	0.2	17.0	0.0	0.0	6,064.6	1,362.0
2000	2,870.9	1,924.6	1,151.3	566.0	162.9	64.0	0.2	47.2	0.2	0.0	6,787.2	1,326.2
2001	2,743.5	1,577.1	1,053.9	481.9	179.8	71.1	0.2	45.4	0.1	0.0	6,153.0	1,407.7
2002	2,649.5	1,760.9	1,302.0	413.2	195.2	89.3	0.2	52.0	0.1	0.0	6,462.3	1,384.1
2003	3,091.8	2,533.8	1,742.5	640.9	355.2	101.9	89.6	32.7	0.3	0.1	8,588.7	2,853.0
2004	4,174.4	3,002.8	1,852.0	910.1	444.8	119.5	112.2	40.9	0.4	0.1	10,657.2	3,572.9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2005

<부표 2> 인도의 對ASEAN 수출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라오스	ASEAN합계	한국
86-90	251.7	40.8	96.6	103.1	9.4	19.4	0.9	0.3	0.4	0.0	522.7	151.9
1991	386.5	145.1	202.8	198.9	12.9	64.4	3.8	0.0	0.6	0.0	1,015.0	241.3
1992	515.1	143.5	221.8	242.0	18.5	76.9	4.2	0.2	0.7	0.0	1,223.0	196.4
1993	727.4	200.3	232.2	317.9	22.1	48.1	14.5	0.3	0.2	0.1	1,563.1	230.4
1994	738.0	252.6	250.2	374.4	42.9	95.4	24.0	1.4	1.3	0.0	1,780.2	278.6
1995	806.6	500.7	355.4	461.2	97.3	122.3	21.2	1.8	5.0	0.3	2,371.9	394.3
1996	942.6	569.0	457.3	434.1	127.3	173.9	45.9	1.3	6.5	0.4	2,758.3	503.8
1997	829.2	475.9	500.2	369.8	124.5	224.9	48.3	2.7	3.2	0.3	2,578.9	480.3
1998	583.1	248.5	363.8	326.8	125.7	148.7	34.9	5.0	3.1	1.0	1,840.4	347.8
1999	633.9	290.7	415.8	417.5	147.2	137.3	33.1	7.4	1.8	1.4	2,085.9	434.4
2000	826.0	385.8	567.9	510.0	208.0	187.8	48.1	7.9	2.8	5.0	2,749.3	457.3
2001	1,016.7	442.1	702.2	611.7	207.3	225.7	53.0	2.6	3.1	5.5	3,269.8	1,005.1
2002	1,052.6	579.8	584.6	705.0	235.2	389.5	57.6	2.8	3.4	6.0	3,676.4	1,135.4
2003	1,942.8	1,050.6	854.1	798.4	390.6	358.7	85.4	18.8	4.9	0.7	5,504.9	732.9
2004	2,534.0	1,206.9	1,171.6	1,036.4	489.1	387.0	106.9	23.6	6.1	0.9	6,962.5	917.8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2005

Abstract

## ASEAN-India Free Trade Agreement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Yul Kwon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In 1992, Prime Minister Rao of India announced his "Look East Policy" that sparked economic cooperation with South East Asian countries as well as ASEAN. As trade and investment in the region expanded,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ASEAN and India developed rapidly. As a result, an agreement of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was signed at the ASEAN-India Summit Meeting in Bali in October 2003, and India's policy is to build up its economic relationship with ASEAN.

Besides, India expressed interest in moving ahead with the idea of building an East Asia Economic Community at the Summit Meeting, Kuala Lumpur, in December 2005. Considering substantial cooperative relations and economic mutual dependence among the Asian countries, it is likely that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sia and ASEAN will develop continuously throughout the East Asia Summit Meeting.

Nevertheless, a significant period of time will need to pass before an FTA between ASEAN and India could substantially take effect, and there is unlikely to be rapid progress in the short

run due to many obstacles.

However, the integration of India and ASEAN as South-South cooperation will comprise a huge free trade area in terms of the market with 1.6 billion people, and \$1.5 trillion in GDP. It should be a key viewpoint in India's FTA policy of how India's government makes good use of the ASEAN-India FTA opportunity. India will become a country of opportunity and challenge for each ASEAN member country. Finally, it is clear that India would get substantial economic effects from an ASEAN-India FTA in the long run.

Key words : Economic Integration, Free Trade Agreement,  
South-South Cooperation

© 2006 KASEAS, All Rights Reserved.